

주간 통일정세

2017-4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13	北, 제재 국면서 '황금산·황금벌·황금해' 달성 독려(연합뉴스)
	11.15	北 김정은, 트랙터공장 시찰...11일만에 또 '경제' 행보(연합뉴스)
	11.16	北, 호주 총리 대북비판에 "美 쪽두각시 노릇 그만둬야" 비난(연합뉴스)
군사	-	-
경제	11.16	싱가포르, 지난 8일부터 대북교역 전면 중단(연합뉴스)
사회	-	-
문화	-	-
외교 국방	11.11	北, 트럼프 亞순방 비난...“우리 악마화해 국제사회와 대치 피해”(연합뉴스)
	11.12	北, 유엔총회서 대북결의 비난하며 “안보리 전면개혁해야”(연합뉴스)
	11.14	北, 러시아 하원 의원들 방북 초청...“하원 의장에 초청장”(연합뉴스)
		北, 러 관광객 유치에 총력...“비자 발급기간 20일→2일로 단축”(연합뉴스)
		北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몰라”...유엔에 한미훈련 비난 서한(연합뉴스)
	11.15	北 신문, 트럼프 국회연설 원색 비난...“선전포고로 간주”(연합뉴스)
	11.16	북·러, 평양서 나진-하산 경제협력 방안 논의(연합뉴스)
11.16	“러시아 하원 대표단 이달 27일부터 닷새간 방북”(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11.15	금성뜨락또르공장 현지지도	박봉주, 오수용, 조용원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1. 15.

■ 北 김정은, 트랙터공장 시찰...11일만에 또 '경제' 행보(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맡겨 준 새형(신형)의 트랙또르(트랙터) 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금성트랙또르공장을 현지도하셨습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공장은 1954년 9월 25일에 설립됐으며 조그만 소농기구 공장에서 시작해 현재의 트랙터 생산기지로 발전함.
- 김 위원장은 트랙터 시운전을 하고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정말 잘 만들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됐다고 하는 트랙터들과 당당히 견줄 수 있다”고 거듭 만족감을 표했으며, 김정은은 이 트랙터의 부속품 총 3천 377종, 1만 228개 가운데 3천 333종, 1만 126개가 자체 생산해 국산화 비중이 98.7% 수준이라며 부품 자급률을 강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1. 13.

■ 北, 제재 국면서 '황금산·황금벌·황금해' 달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미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전략폭격기, 핵전략잠수함을 3대 전략자산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3대 전략자산은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라면서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3대 전선을 다 같이 밀고 나가 온 나라 강산에 행복과 기쁨에

-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호소함.
- 신문은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한 듯 “이 땅을 향해 악착하게 가해진 원수들의 전대미문의 발악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과 웃음, 꿈과 미래를 강탈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원수님(김정은)께서 계시기에 인민의 웃음도 미래도 영원하다”라고 주장함.
 - 특히 노동신문은 이날 정론에서 과일군과 북청군의 과일 풍작, 여러 곡창지대에서의 곡물 대풍, 수산물 생산 계획 초과 달성 등을 언급하며 대북제재에도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부각함.

2017. 11. 16.

■ **北, 호주 총리 대북비판에 “美 꼭두각시 노릇 그만둬야”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외무성 고위 관리 개인 명의로 맥컴 턴블 호주 총리의 최근 대북 비판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고 제집 일이나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함.
- 최희철 외무성 부상은 16일 담화에서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이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대북) 제재 압박 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혐담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최 부상은 턴블 총리가 지난 12일 홍콩을 방문했을 때 북한을 국가로 위장해 활동하는 ‘범죄조직’으로 표현한 것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11. 16.

■ 싱가포르, 지난 8일부터 대북교역 전면 중단(연합뉴스)

- 싱가포르 관세청이 지난 7일 자로 무역 업체와 중개인들에게 보낸 회람(circular)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됨.
- 대북교역 금지는 물품-대금 교환과 물물교환 방식을 망라하며, 북한과의 직접적인 수출입은 물론 환적(換積), 싱가포르를 경유지로 한 화물 운송 등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고 싱가포르 관세청은 밝힘.
-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외교관 등의 개인용 물품, 사람의 사체와 유골 등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인 비상업적(non-commercial)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사흘 전까지 수출입 물품 신고 사이트인 트레이드넷(TradeNet®)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1. 11.

- **北, 트럼프 표순방 비난…“우리 악마화해 국제사회와 대치 꾀해”(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행각에 나선 트럼프가 지난 5일부터 우리 주변을 돌아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빼앗아 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어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상인의 장사 행각에 불과하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 놓았으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고 주장함.
 - 이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가 지난 9월 유엔총회 마당에서 우리 공화국의 절멸이라는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댄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 거부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국가를 악마화하여 우리 정부와 인민을 갈라놓고 조선(북한)과 국제사회를 대치시켜보려고 꾀한 것”이라고 지적함.

2017. 11. 15.

- **北 신문, 트럼프 국회연설 원색 비난…“선전포고로 간주”(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5일 ‘미치광이 대통령이 저지른 만고 죄악을 단죄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괴뢰 국회에까지 낫짝을 내민 트럼프는 35분짜리 연설 가운데 무려 22분 동안이나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왜곡 날조하여 더러운 구정물을 토해내고 갖은 악설을 해대며 내외를 경악시켰다”고 비판함.
 - 신문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각종 계기들과 트위터를 통해 때 없이 내뿜던 반공화국 광언망설과 흉언패설의 종합체가 바로 트럼프의 괴뢰 국회연설”이라면서 최고존엄 중상모독, 북한 사회주의제도 비방, 인민 생활에 먹칠, 대북 압살 등의 ‘죄악’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의 코앞에서 쫓겨댄(지결인) 악담을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박테리아’, ‘바퀴 새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11. 14.

- **北, 러시아 하원 의원들 방북 초청…“하원 의장에 초청장”(연합뉴스)**
 - 북한의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러시아 의원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러시아 하원 러-북 의원 친선 그룹 관계자가 14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북 의원 친선 그룹 간사를 맡고 있는 러시아 공산당 소속 하원 의원 카즈벡 타이사예프는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 앞으로 방북 요청 초청장을 보냈다”고 전했으며, 북한은 모든 하원 원내 정당 대표들을 평양으로 초청했으며 방북 시기는 러시아 측의 결정에 맡겼다고 타이사예프는 소개함.
 - 타이사예프는 “하원 해당위원회가 대표단을 파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언제 결정이 날지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北, 러 관광객 유치에 총력…“비자 발급기간 20일→2일로 단축”(연합뉴스)**
 - 인테르팍스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북한 관광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러시아 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방북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줄이고 새해 연휴 여행 상품을 내놓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업무를 시작한 모스크바의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 엔코리안(NKOREAN)은 “1년 전에만 해도 평균 20일이 걸리던 러시아인들에 대한

북한 비자 발급 기간이 이틀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여행 절차 간소화의 매력을 강조함.

- 여행사 측은 일반 관광, 스키 관광, 새해맞이 관광 등의 다양한 관광 상품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새해맞이 관광 상품의 경우 평양의 주요 유적지와 묘향산 관광, 새해맞이 파티와 불꽃놀이 관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함.

2017. 11. 15.

■ **북·러, 평양서 나진-하산 경제협력 방안 논의(연합뉴스)**

- 15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전날 평양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차관)과 만나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반출과 관련해 양국 사이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함.
- 북·러 양측은 나진-하산 철도와 나진항 제 3부두를 통한 화물 운송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함.
- 또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주관사이자 러시아와 북한의 합자회사인 ‘나선콘트라스트’(RCT)의 투자지분 재조정 문제를 북한과 협의함.

2017. 11. 16.

■ **“러시아 하원 대표단 이달 27일부터 닷새간 방북”(연합뉴스)**

-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이 이달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러-북 의원친선그룹 간사인 공산당 소속의 카즈백 타이사예프 의원이 16일 밝힘.
- 대표단에는 하원 원내 4개 정당 대표들과 러-북 의원친선그룹 소속 의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타이사예프는 설명함.
- 대표단 단장은 타이사예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짐.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1. 11.

■ **北, 유엔총회서 대북결의 비난하며 “안보리 전면개혁해야”(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가 최근 유엔총회 제72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안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서의 균등한 대표권과 성원국 확대, 기타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연설하였

- 다”며 북한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미국이 안보리를 ‘악용’해 왔으며 “철면피하게도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무력강화 조치들을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불법 비법의 결의 아닌 결의들을 조작해 왔다”고 비난함.
 - 이어 그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땅히 달라진 시대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며 “특정한 나라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더 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2017. 11. 14.

■ 北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몰라”…유엔에 한미훈련 비난 서한(연합뉴스)

- 북한이 1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함.
-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훈련이 한반도 주변에 최악의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숨통을 죄기 위해 1년 연중 쉽 없이 벌이고 있는 핵전쟁 연습과 협박은 우리의 선택(핵개발과 대미 강경책)이 올바른 것이었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함.
- 그는 미국이 항모와 함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상시 출격시키는 것은 냉전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라면서 미국이 기습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힘.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관계	11.14	외교부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긴밀한 협의 이어오고 있어”(연합뉴스)	
	11.15		美전문가들, 트럼프 순방 “한미관계 진전…FTA 등 갈 길 남아” (연합뉴스)
	11.16		로스 美상무장관 “한미FTA 조기개정 희망…美 적자폭 너무 커”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12		시진핑, 정상회담서 “韓과 관계 중시…관계발전 강력 희망” (연합뉴스)
	11.13		中 “금한령 존재하지 않아…한중 교류 정상궤도로 복귀 원해” (연합뉴스)
	11.14		리커창, 문 대통령에 “韓은 중요한 동반자…협력 잠재력 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13	외교1차관 “日, ‘독도세우’ 문제시하는 것 합리적이지 않다” (연합뉴스)	
	11.14	이수훈 주일대사, 日 고노 외상 면담…“서틀외교 복원 노력하자”(연합뉴스)	
	11.15	日 “위안부합의로 피해자 명예회복” vs 韓中 “불충분한 합의”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1.13		트럼프의 '시진핑 대북제재강화 약속' 트윗에 中 "입장변화 없어"(연합뉴스)	
	11.14	美, 중국산 합관에 '반덤핑·상계관세 폭탄'...中 반발(연합뉴스)		
				中, 美의 남중국해 분쟁개입 경계...“미국의 도움 필요없다”(연합뉴스)
	11.15	트럼프 방중후 美中 합동 구조훈련...도피사범도 서로 송환(연합뉴스)		
			트럼프 “시 주석과 ‘쌍중단’ 용납 불가 동의”(자유아시아방송)	
		11.16		中 “쌍중단, 대화재개 돌파구...쌍궤병행, 한반도 안정 실현방안”(연합뉴스)
11.17	미국무부, ‘미-중, 쌍중단 포기 합의’ 재확인(미국의소리)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14	로스 美상무 “日·아시아가 미국보다 더 보호주의적”(연합뉴스)		
	11.16	美日 해군, 日오키나와 주변서 열흘간 합동훈련...레이건호 참가(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1.11		러, 자국내 美 언론매체 규제나서...“외국대행사로 지정 추진”(연합뉴스)	
	11.12		크렘린궁 “미국 고집에 APEC서 미·러 정상회담 무산”(연합뉴스)	

		트럼프 “中 이어 러시아가 도우면 北문제 훨씬 빨리 해결”(연합뉴스)	
	11.13	트럼프, “러시아 대선 개입 관련 미 정보기관 믿어”...말 번복 (미국의소리)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11	아베·시진핑, 베트남서 회담...“양국 관계 개선 추진”(연합뉴스)	
	11.13	日아베- 中리커창, 회담...“中日 관계 개선 방침 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1.11	중·러 밀착 가속...시진핑, APEC서 푸틴 가장 먼저 만나(연합뉴스)	
		中·러, 북극해 경유 ‘얼음의 실크로드’ 공동 개척(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1.12		푸틴 “러시아-일본 평화조약 체결에 오랜 시간 걸릴 것”(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1. 14.

■ 외교부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긴밀한 협의 이어오고 있어”(연합뉴스)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예고한 ‘중대성명’과 관련,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밝힘.
- 노 대변인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자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일치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힘.
- 그는 “한미 양국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하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함.

2017. 11. 15.

■美전문가들, 트럼프 순방 “한미관계 진전...FTA 등 갈 길 남아”(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관계가 진전됐다고 평가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등을 앞두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진단함.
-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 브리지그룹’ 선임 고문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두 정상은 회담에서 차이를 매우 잘 관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매우 정교하게 이뤄졌다”며 “그러나 국회 연설은 북한을 화나게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은 비판 트윗과 맞물려 북한에 대한 그의 강경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발언함.
-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꽤 성공적이었다. 중국이 기꺼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제재를 실행하는 데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듯 보였다”고 평가했으나, “한미

FTA를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협정이나, 나쁜 협정이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한 뒤 “개정 협상이 완료된 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함.

- 더글러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북한에 대한 극단적 입장을 누그러뜨리며 향후 협상 여지를 열어줬다”며 “한국과의 양자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함.

2017. 11. 16.

■ 로스 美상무장관 “한미FTA 조기개정 희망…美 적자폭 너무 커”(연합뉴스)

-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조기 성사 의지를 밝힘.
- 로스 장관은 “미국의 적자폭이 너무나 커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됐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면서 적자 원인으로는 지리적으로 중국 문제를 거론한 뒤 자동차 부품 문제를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동석한 김현 대변인은 설명함.
- 그는 특히 “미국산 차량에 대한 특정 부품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미국산 차량에 대해 특정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나. 한·중 관계

2017. 11. 12.

■ 시진핑, 정상회담서 “韓과 관계 중시…관계발전 강력 희망”(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서 관계발전을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한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자 자연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으며, “양국은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 계획을 도출하고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함.

- 아울러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문제에 관해 양국은 모두 반드시 역사와 중한 관계, 양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책을 도출해야 하고 중한 관계가 계속해서 정확한 방향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중시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함.

2017. 11. 13.

■ **中 “금한령 존재하지 않아…한중 교류 정상궤도로 복귀 원해”(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경샹(耿爽)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봉인’ 후 금한령과 관련한 질문에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과 중국 간 교류가 정상궤도로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함.
- 그는 “문화 방면에 제한 지시를 들어본 적이 없어 풀린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또한 “중한 관계와 관련해 양국 지도자는 베트남에서 회담했다. 양측은 조속히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한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정신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함.

2017. 11. 14.

■ **리커창, 문 대통령에 “韓은 중요한 동반자…협력 잠재력 커”(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함.
- 리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문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에 온 힘을 다하는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면서 “양국이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정치적 상호 신뢰를 귀중히 여기고,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 리 총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은 최근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했다”면서 “한국이 계속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고, 중한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7. 11. 13.

■ 외교1차관 “日, ‘독도새우’ 문제시하는 것 합리적이지 않다”(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해 ‘일본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에 나온 음식에 대해 항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만찬 메뉴는 의전 사항으로, 이런 것을 문제시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함.
- 임 차관은 “(일본 측에)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이것이 의전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힘.
- 임 차관은 또 소 의원이 ‘일본 측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모신 것에 관해서도 얘기했다’고 묻자 “그 문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라며 “만찬 행사에 차린 음식, 초대한 손님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이고,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함.

2017. 11. 14.

■ 이수훈 주일대사, 日 고노 외상 면담…“서틀외교 복원 노력하자”(연합뉴스)

- 이수훈 주일 대사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14일 일본 외무성에서 면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정상간 서틀외교의 복원에 노력하기로 함.
- 이 대사는 면담 후 “다음달 혹은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한 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방한하면 서틀외교가 복원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언함.
- 이와 함께 이 대사와 고노 외무상은 내년이 한일관계의 전기를 마련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20

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인 만큼,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2017. 11. 15.

■ **日 “위안부합의로 피해자 명예회복” vs 韓中 “불충분한 합의”(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측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 15일 신문에 따르면 인권이사회에 일본 인권상황 정기심사에 출석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협력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많은 피해자나 시민단체는 불충분한 합의이며,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1. 13.

■ **트럼프의 ‘시진핑 대북제재강화 약속’ 트윗에 中 “입장변화 없어”(연합뉴스)**

-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경왕(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틀 안에서 제재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함.
- 경 대변인은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고 주장함.
- 경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성실히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실천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심각한 가운데 유관 각국이 합당한 역할을 발휘하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2017. 11. 14.

■ **美, 중국산 합판에 '반덤핑·상계관세 폭탄'...中 반발(연합뉴스)**

-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에서 판매한 합판 제품이 공정가보다 183.36% 낮았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으며, 또 중국이 자국 합판 업체들에 22.98~194.90%의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음을 밝힘.
- 미 상무부는 이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와 결정이 중국의 합판 수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며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힘.

■ **中, 美의 남중국해 분쟁개입 경계...“미국의 도움 필요없다”(연합뉴스)**

- 1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차이나데일리 등은 사평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미국의 도움은 필요없다고 강조함.
-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관련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 관련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는 명확한 신호를 낸 것이라고 자체 해석함.
-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는 수십년동안 지속된 것이지만 외부의 개입, 특히 미국과 일본이 선동적으로 개입한 지난해 가장 위기 상황에 근접했다며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고, 미국과 일본 등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과대포장함으로써 관련국들에 공포감을 불어넣었다고 비난함.

2017. 11. 15.

■ **트럼프 방중후 美中 합동 구조훈련...도피사범도 서로 송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합동으로 재난 대처 훈련을 갖고 도피사범도 서로 송환하는 등 교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
- 15일 중국 반관영 통신 중신사에 따르면 미중 양국군은 지난 13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인도주의 구조 및 자연재해 대처를 위한 연구토론 교류회와 함께 실제 병력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벌이는 중임.

- 미중 양국의 교류 분위기는 사법 영역에서도 이루어져, 중국 공안당국은 자국에 도피해 있던 미국인 범죄 용의자를 붙잡아 최근 미국으로 송환했으며 미국도 올해 들어 중국에 2명의 중국인 부패사범을 송환해 준 바 있음.

■ 트럼프 “시 주석과 ‘쌍중단’ 용납 불가 동의”(자유아시아방송)

-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아시아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불량 정권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세계 각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중국에 매우 심각한 grave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함.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쌍중단(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 협정 제안에 “시 주석과 나는 과거에 끊임없이 실패한 ‘동결 대 동결’ 협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힘.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최대 핵심 목표 3가지 중 하나는 북핵 위협 대응이었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2017. 11. 16.

■ 中 “쌍중단, 대화재개 돌파구…쌍궤병행, 한반도 안정 실현방안”(연합뉴스)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쌍중단’(freeze for freeze) 수용 불가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동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북핵문제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 경 대변인은 “중국의 북핵 문제에 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강조함.
- 경 대변인은 자국이 제시한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에 대해 “쌍중단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실현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쌍중단은 현재 긴장국면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가장 시급한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함.

2017. 11. 17.

■ **미국무부, ‘마중, 쌍중단 포기 합의’ 재확인(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가 “쌍중단”으로 불리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이런 방침에
중국도 동의했다고 거듭 확인함.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중국 외교부가 이날
쌍중단을 여전히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
과 엇갈린 것 아니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 나라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답변함.
- 애덤스 대변인은 “쌍중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여, 적법
하고 오랫동안 실시해온 방어 차원의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등가성도 없다고 설명함.

나. 미·일 관계

2017. 11. 14.

■ **로스 美상무 “日·아시아가 미국보다 더 보호주의적”(연합뉴스)**

- 월버 로스 미국 상부장관이 13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 경제관계자들이 참석
한 모임에서 강연하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보다 더
보호무역주의적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 자동차
시장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NHK가 보도함.
- 로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자유무역을 지지한
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보다 더 보호주의적”이라고 강조했다며, 구체적으
로 일본은 농산물 관세가 높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미국이 보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발언함.
- 이어 자동차 시장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은 고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데 왜 자국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본 자동차 시장
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의 시정을 요구함.

2017. 11. 16.

■ **美日 해군, 日 오키나와 주변서 열흘간 합동훈련…레이건호 참가(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16일부터 열흘간 일본 남부 오키나와(沖繩) 주변 해역에서 연례 합동 훈련을 펼친다고 미 해군이 밝힘.
- AFP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전함과 1만4천명의 미해군 병력이 참가함.
- 이번 훈련은 로널드 레이건, 니미즈,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각각 합동훈련을 벌인 직후 실시되는 것으로, 미해군은 “이번 정례 훈련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항공과 해상 작전 훈련을 통해 통신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다. 미·러 관계

2017. 11. 11.

■ **러, 자국내 美 언론매체 규제나서…“외국대행사로 지정 추진”(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10일(현지시간) 외국 언론 매체들도 ‘외국대행사’(foreign agent)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라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시함.
- 이 같은 조치는 미 법무부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관영 뉴스전문 방송채널 ‘RT’에 오는 13일까지 외국대행사로 등록하도록 명령한 데 대한 맞대응임.
- 러시아 의회는 법률 개정을 서둘러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CNN, 미국의 목소리(VOA) 등 여러 미국 뉴스 매체들을 똑같이 외국대행사로 등록시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2017. 11. 12.

■ **크렘린궁 “미국 고집에 APEC서 미·러 정상회담 무산”(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공식 양자회담을 열지 못한 건 미국 때문이라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주장함.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러 정상이 몇 차례의 짧은 접촉만 하고 제대로 된

공식 양자회담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실제로 우리는 별도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시도했으며 이 작업은 양국 의전 및 다른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고 소개함.

- 페스코프는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 측에 맞지 않는 시간만을 제안하고 장소도 자신들이 임대한 곳만을 고집하면서 양자회담이 무산됐다고 전함.

■ 트럼프 “中 이어 러시아가 도우면 北문제 훨씬 빨리 해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우리를 돕는다면 그(북한) 문제는 훨씬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자, 위대한 일”이라며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에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발언함.

2017. 11. 13.

■ 트럼프, “러시아 대선 개입 관련 미 정보기관 믿어”…말 번복(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푸틴과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믿는지 아닌지 예, 아니요로 답해달라’는 요청에 “나는 우리 정보기관을 지지한다”고 답변함.
-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현재 구성된 정보기관을 특히 믿는다”며 “훌륭한 사람들이 이끌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을 매우 신뢰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의 말은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되는 발언임.
-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다시 물어봤더니 그는 우리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의 말은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음.

라. 중·일 관계

2017. 11. 11.

■ 아베-시진핑, 베트남서 회담…“양국 관계 개선 추진”(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오후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 또한 조기에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시 주석은 “총리의 중국 방문과 왕래를 중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아베 총리에게 “안정된 중일 관계가 쌍방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양국은 평화, 우호, 협력이라는 큰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일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2017. 11. 13.

■ 日아베- 中리커창, 회담…“中日 관계 개선 방침 확인”(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하고 양국간 관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이 13일 보도함.
-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 일중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호혜관계의 발전과 관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며 “이런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더 착실하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발언함.
- 리 총리는 “최근 중일관계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물론 일부 민감한 요인도 존재하지만, 서로 노력해서 중일관계의 개선의 기세를 함께 강고하게 하자”고 발언함.

마. 중·러 관계

2017. 11. 11.

■ 중·러 밀착 가속·시진핑, APEC서 푸틴 가장 먼저 만나(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가장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별도로 회담함.
- 11일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일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는 진정한 상호 신뢰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으며, “중·러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좋은 국제사회의 모델”이라면서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힘.
- 또한 시 주석은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국 외교 방침인 ‘신형 국제 관계’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함.

■ 중·러, 북극해 경유 ‘얼음의 실크로드’ 공동 개척(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해를 이용해 유럽과 북미, 중국 등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 항로를 의미하는 ‘얼음의 실크로드’ 개척에 협력키로 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힘.
- 11일 중국재경신문 등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북극 지역의 개발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원양운수총공사(COSCO)는 최근 북극 항로에서 수차례 시범 운항을 마쳤다”고 밝힘.
- 가오 대변인은 “중·러 교통부가 북극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양국 기업이 북극의 석유·천연가스 탐사 협력을 적극 모색했다”면서 “상무부는 북극 항로 개발·이용 증진 및 기초시설 건설·관광·과학 탐사 등 포괄적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러시아 당국과 협력 중”이라고 설명함.

바. 일·러 관계

2017. 11. 12.

■ 푸틴 “러시아-일본 평화조약 체결에 오랜 시간 걸릴 것”(연합뉴스)

- 11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함.

- 그는 “평화조약과 관련해선 많은 문제가 있다.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다른 파트너 국가들(미국 등)에 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이 평화조약 체결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본이 무엇을 독자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고 설명했으며,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는 아주 큰 작업”이라면서 “실제로 이 작업은 1년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함.
-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양자 관계 문제들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예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문제를 예로 들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11	미 하원의원들 '공산주의 희생자 코커스 결성...'북한인권 실태 다룰 것'(미국의소리)
	11.14	국무부 "북한과 대화하려는 목적은 비핵화...인권 문제도 좌시 안 해"(미국의소리)
		미 인권전문가들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인권 보다 우선시 해선 안 돼"(미국의소리)
	11.16	국무부 "인권결의 채택은 북한 관리에 보내는 강력 신호"(미국의소리)
인권전문가들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미국의소리)		
11.17	유럽서 북한인권 문제 관심 높아져(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11.13	北선전매체, 南 유엔 대북인권결의 참여 비난(연합뉴스)
	11.15	요덕 '15호 관리소', 수감시설 대거 철거(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11.14	통일부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적절한 타이밍 보고 있다"(연합뉴스)
	11.15	외교부, 유엔의 이산가족 인권 보호 강조 주목(자유아시아방송)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11.12	"탈북 처자식 복송 막아주세요" BBC통해 시진핑·트럼프에 호소(연합뉴스)
	11.15	유엔, 北인권규탄결의 채택...'이산가족·北억류자'합당조치 요구(연합뉴스)
대북지원	11.11	유엔 대북인도지원 '찬바람'...모금 목표의 30%만 견혀(연합뉴스)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1. 11.

- **미 하원의원들, ‘공산주의 희생자 코커스’ 결성…“북한인권 실태 다룰 것”(미국의소리)**
 - 미국 하원에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 희생자를 위한 의원단 모임이 결성됨.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등 공산주의 국가의 잔혹성을 고발할 계획임. 이에 미 하원의원들이 8일 초당적 모임인 ‘공산주의 희생자 코커스(Victims of Communism Caucus)’를 결성함.
 - 민주당의 마시 캡처 의원과 덴 리핀스키 의원, 공화당의 데니스 로스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 4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함. 공동 의장을 맡은 캡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공산주의가 남긴 잔혹성과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독재 정치가 소련 붕괴 이후 국제관계 지평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의원들은 특히 북한을 비롯해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등 5개 공산주의 국가를 겨냥함.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위험한 수사와 핵, 미사일 기술 진전이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코커스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힘. 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집중 조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2017. 11. 14.

- **국무부 “북한과 대화하려는 목적은 비핵화…인권 문제도 좌시 안 해”(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힘. 또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현장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하라고도 촉구함. 미국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국무부가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함.
 - 또한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등에 명시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며, 국제 인권 감시관의 제한 없는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미 인권전문가들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인권 보다 우선시 해선 안 돼”(미국의소리)**

-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에 문제를 제기함. 핵 문제가 해결돼도 인권 문제를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고 지적함.
-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하나로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함.
-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함.
-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10일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단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인들이 독재정권 아래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함.
-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핵 문제가 해결되면 인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인권 문제도 핵 문제와 함께 동등하게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 정권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2017. 11. 16.

■ **국무부 “인권결의 채택은 북한 관리에 보내는 강력 신호”(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는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북한 당국자들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함.
-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는 우리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과 검열을 폭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모든 북한 관리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힘.

■ **인권전문가들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미국의소리)**

-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3년 연속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즈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함.
- 유엔이 13년 연속으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임.
-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와중에도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매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며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함.
-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반영한 결의안을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2017. 11. 17.

■ 유럽에서 연이은 ‘북 인권’ 고발 행사(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에서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 단체들이 밝힘. 그러면서 이 같은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벨기에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재유럽탈북민총연합회(유럽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과거와 다른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고 말함.
- 장 회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유럽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등으로 유럽의 여론이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함.
- 그러면서 최근 벨기에 최고 명문인 루벤대학교에서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외신기자클럽과 인권 단체들에서도 행사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1. 13.

■ 北선전매체, 南 유엔 대북인권결의 참여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함.

-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개인필명 논평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 “유엔에서의 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쫓겨대고(지껄이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엔에서 동족을 모해하고 혈투는 인권결의안 조작놀음에 가담해 나선 현 괴뢰 당국은 이명박, 박근혜 역적 패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족 대결집단”이라면서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현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후과만을 빚어낼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2017. 11. 15.

■ **요덕 ‘15호 관리소’, 수감시설 대거 철거(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15호 관리소인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시설이 계속 철거되고 있음. 이전에는 일부 구역에서만 수감시설이 철거됐지만, 최근에는 수용소 전체 중 약 30곳에서 이 같은 변화가 확인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2014년부터 시작된 움직임임. 하지만 아직 수용소의 폐쇄로 단정하기에는 이룸.
- 북한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가 가득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음. 평안남도 개천군의 ‘제14호 관리소’ 옆에는 새 수용소가 조성됐고,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북창의 ‘제18호 관리소’도 철조망을 따라 경비초소를 새로 세우고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부활을 알린 가운데 ‘제15호 관리소’의 변화가 주목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1. 14.

■ **통일부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적절한 타이밍 보고 있다”(연합뉴스)**

- 통일부는 14일 대북지원을 위해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시점에 대해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와 실무 협의를 지속 추진 중이며,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공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함.
-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

- 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지만, 실제 공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통일부는 당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정부는 북한이 60일간 도발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대북지원을 집행하기에는 국내외 여론이 충분히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짐. 통일부는 또 북한 핵실험 지역 출신 탈북민 30명에 대한 방사능 피폭 검사가 이달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힘.

2017. 11. 15.

■ **외교부, 유엔의 이산가족 인권 보호 강조 주목(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3년째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힘. 한국 정부는 특히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가 강조된 점에 주목함.
- 한국 정부가 15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의 새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를 환영함.
-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이산가족과 북한 내 억류자의 인권 보호 문제가 다뤄진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함.
- 외교부는 “유엔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과 억류자의 인권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 동안 상봉 행사가 열리기만을 기다려온 남한의 이산가족들도 북한이 유엔의 결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봉 정례화와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주길 희망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1. 12.

■ **“탈북 처자식 복송 막아주세요” BBC통해 시진핑·트럼프에 호소(연합뉴스)**

- 2015년 탈북한 남성이 최근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에 붙잡힌 아내와 아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아 달라고 중국 정부에 호소함.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자신을 ‘리’ 라고만 밝힌 이 남성이 이같이 요청하는 영상 메시지를 받았

다고 보도함.

- 리 씨의 아내와 4살 아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 10명은 지난 4일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복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 리 씨는 “아내와 아들이 복송되면 사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시들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의 아이를 손주라고 생각하고 자유의 나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함.

2017. 11. 15.

■ 유엔, 北인권규탄결의 채택...‘이산가족·北억류자’합당조치 요구(연합뉴스)

- 유엔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 결의는 회원국 가운데 어느 곳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뤄짐.
-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채택될 예정임. 이렇게 되면 13년 연속해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임.
- 결의에선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김.
-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결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또 COI가 북한 지도층을 겨냥해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 등을 요구한 점도 상기함.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거론한 것 임.
- 특히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됨.
- 결의는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함.
-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선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함.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결의는 아울러 임신부와 영유아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식량,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을 규탄함.
 -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컨센서스 채택 전 아무런 포결 요구나 반대 표시를 하지 않다가 결의채택 이후 뒤늦게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유엔 안팎에선 북한을 의식한 외교적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옴.
 -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함.

5. 대북지원

2017. 11. 11.

■ 유엔 대북인도지원 ‘천바람’…모금 목표의 30%만 견혀(연합뉴스)

- 유엔이 올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30%만 모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이 방송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보고서를 인용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기금 목표 예상 1억1천350만 달러 중 약 3천390만 달러만 확보돼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며 “이는 올해 필요한 대북지원 목표예산의 약 30%에 머무는 수치”라고 설명함.
- OCHA의 모금현황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대북지원사업에는 유엔 국제구호기금(CERF),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기구와 스위스,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 미국,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등 7개 국가가 참여함.